

사드 배치 결정 과정 감사원이 직무감찰

靑 “국방부 자체 조사 한계…고강도 감찰 조사 불가피”

한민구 장관·김관진 전 실장 등 전 정부 외교안보라인 대상

감사원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를 결정한 국방부의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전방위적인 고강도 직무감찰에 나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을 포함한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일단 해당부처인 국방부가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커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의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안의 성격과 조사대상 및 범위 등을 감안할 때 국방부 자체 조사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결국 감사원 차원의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감찰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청와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주체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해당부처인 국방부도 조만간 새로운 국방장관이 인선되면 내부 협의를 통해 자체 조사 문제와 함께 감사원에 대한 직무감찰 의뢰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방부 핵심 실무자가 의도적으로 사드 배치 4기 추가 반입보고를 누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배경에는 사드 국내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이뤄진다면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전(前)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모두 조사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 군사당국 간 합의와 관련된 것이어서 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더라도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철거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 배치된 부분은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임에도 그대로 배치돼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거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기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관련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기지 면적을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선 부지면적 33만㎡ 이하의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다. 이 상일 때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유심나 3년만에 송환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해외도피 3년 만에 범 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연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심나(51)씨가 7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특수활동비 돈 봉투 문제없다” 면죄부 감찰 논란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에 받게 됐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검찰 지시에 따라 지난달 18일 22명 규모 합동감찰반을 꾸린 지 20일 만이다.

감찰조사를 총괄한 장인중(54·18기) 검찰관은 “봉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금모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하되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검찰의 요직으로 ‘빅2’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검찰국장에 취임했던 이들은 사실상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심의한다. 징계는 중징계인 해임, 면직,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다만, 돈 봉투를 받은 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법무부 검찰국 과장 등 나머지 만찬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또 모인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감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주요 일지

2017년 4월21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핵심 간부 검사 6명,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간부 2명,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 과장 간부들에게 돈 봉투 전달

서로 격려금 지급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부들에게 돈 봉투 전달

4월22일 법무부 검찰국 과정 간부들, 이 지검장에게 받은 돈 봉투 반환

이 지검장

5월15일 한겨레, 4월21일 '돈봉투 만찬사건' 저녁식사 내용 보도

5월17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와 검찰청에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 법무부·대검찰청 긴급회의 소집해 감찰 논의

5월18일 이 지검장, 안 국장 동시 사의 표명. 청와대, '감찰 중에는 사의수리 안돼'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반 22명 투입 등 민정수석실에 합동 감찰 계획안 보고

5월19일 합동감찰반, 만찬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 문재인 대통령, 이 전 지검장과 안 국장을 각각 부신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처

5월24~28일 서울중앙지검, '돈 봉투 만찬' 고발 사건 조사1부에 배당. 합동감찰반, 이 전 지검장과 안 국장 대만찬 당사 등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과 참고인 등 20여명 대면조사

6월7일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 발표

이 전 지검장 (면직) 청탁금지법 위반·예산집행지침 위반·동류순상·지휘감독소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의뢰 권고

안 전 국장 (면직) 동류순상·지휘감독소홀

나머지 참석자 8명 경고, 동류순상 등

아베 총리 특사단, 10~11일 전남 방문

관광객 유치…교류 활성화 기대

12~13일 대통령에 친서 전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사단이 방한 일정의 절반을 전남에서 보내기로 해 눈길을 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 특사로 한국에 파견되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집권 자민당 간사장 등 특사단은 오는 10~11일 전남 목포를 방문한다. 니카이 간사장은 12~13일 서울 일정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카이 간사장은 전남도와 자매 교류를 맺고 있는 고지(高知) 현의 오자키 마사나오(尾崎正直) 지사,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과 목포에 있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공생원을 찾는다.

공생원은 윤학자(1912~1968·일본명 다우치 치츠코) 여사가 3000여명의 고아를 돌본 곳이다. 윤학자 여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리의 외동딸로 태어나 목포로 온 뒤 공생원을 운영하던 조선인 전도사와 결혼해 고아들을 길렀다.

특사단을 이끄는 니카이 간사장은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와 이낙연 총리 등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단 전남 방문은 박지원 전 대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방문단에 다수 포함되면서 일본 관광객 유치 등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했다.

/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송기호 변호사 “세월호 7시간 문건 공개하라” 소송

구조활동 등 적힌 목록 요구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송 변호사는 7일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가 공개를 요구한 문건은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제목, 작성 시간, 작성자가 적힌 목록이다.

앞서 송 변호사는 청와대에 해당 문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송 변호사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관련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하도록 한다.

송 변호사는 “공개할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다”며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목록 봉인을 해제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의석 분포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소송이 시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 접근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용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일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단지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지리 1층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방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000만원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100만원

문의 010-9203-6161